

극적 타결이나 파행 재연이나

“비정규직법 처리 후 쇠신안 전달”

■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사태 분수령

“비정규직 강행처리” “2년 유예 양보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한나라당은 단독 국회 강행을 천명하며 비례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6일째 국회 본회의 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 국회에 조기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한나라당=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천명, 29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쟁점법안 심의에 나서는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기로 그 시기를 못 박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미디어 관련법을 6월에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못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미디어 관련법이 어떻게 언론자유법이나”며 “과거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디어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3단계 늘리고 수도권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법을 어떤 내용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

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여성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집중하면서도 결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물밑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회의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우선 각 측이 협의안을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도 “다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원내 지도부 내부 회의는 진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29일 오전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5인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 부대표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운 의원은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이 2년 유예를 고집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테nder를 점거 농성을 본회의 개최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쇠신평위, 靑 인적쇄신 등 포함

한나라당 쇠신평위는 청와대와 정부 개편이 포함된 여권쇄신안을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완료되는대로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쇠신안은 빠르면 1일 당 지도부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쇠신평위 대변인은 28일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라며 “쇄신위는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직후부터 쇠신안을 당내 절차를 밟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쇄신위는 현재 (쇄신

안) 보고할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라며 “쇄신안 전달을 끝내면 쇠신평위 활동은 마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쇄신안에는 ▲국민통합과 민생중심으로 국정운영기조 전환 ▲청와대와 내각의 일대 인적쇄신 ▲국민통합형 내각 구성 ▲정무장관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기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쇠신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마지막으로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쇠신평위가 당 소속 의원과 원

외 당원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정운영기조를 중도실용주의로 재정립하대 대해 54명이 ‘매우 공감’, 50명이 ‘공감’을 표시하는 등 104명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기전대 시기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의원 73명 가운데 27명이 ‘10월 이전’, 30명이 ‘10월 이후’를 제시했고 16명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원외 당원위원장 44명의 경우에는 28명이 ‘10월 이전’, 11명이 ‘10월 이후’, 5명이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 여부에 대해선 58명이 ‘매우 공감’, 46명이 ‘공감’을 표시하는 등 104명이 인적쇄신에 지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與 잠룡들 조기 쏘대 ‘동상이몽’

이재오·정몽준 9월, 박근혜 내년 1월에 무개

한나라당 당 쇠신평위의 쇠신안 마련이 임박함과 동시에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이하 전대)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관한 의견은 9월설과 내년 1월설로 모아진다. 쇠신평위는 우선 친박계의 반발 때문에 내년 1월 전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이계 강경파와 민본 21 등 당 내 소장파는 9월 전대에 방침을 잡고 있다. 특히 박희태 대표가 10월 양산 재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9월 전대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조기전당대회를 통한 당권의 확보는 대권으로 향하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기 전대’ 문제는 잠룡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이재오 전 최고위원 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조기 전대가 대체로 굳어질 경우 내년 1월 전대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10월 재보선의 후폭풍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정치 현안에 입을 닫고 있지만 ‘조기 전대를 통한 정치복귀’를 결심할 경우 9월 전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내년 1월 전대가 치러질 경우 박 전 대표가 ‘판’을 주도할 것이며, 이 경우 주류의 입지는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그동안 조기 전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당내 유력인사의 참여를 주문해왔다. 지난 2007년 11월 입당, 아직까지 당내 입지가 취약한 정 최고위원으로서의 소위 ‘홍행’이 되는 전대를 통한 당권 확보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박영석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박영석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대안·길거리 정당” “MB정책 위장된 공약”

■ 여야 ‘서민정책’ 싸고 공방 치열

여야가 ‘서민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 강화 움직임을 대해 “위장된 민생공약이자 이미지 조작”이라며 고강도로 비판하고 있다.

당장 부자감세 및 서민증세, 잘못된 일자리정책, 거꾸로 가는 물가정책, 투기 조장 주택정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몰락, 복지 축소, 교육 황폐화 등을 이명박 정부의 ‘7대 반(反)서민정책’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보육교사 초과수당 지급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확충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 ▲등록금 후불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10대 교육·복지·민생 예산을 자체 선정했다.

여기에 악성 고리채 근절을 위한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법, 골목상점 활성화법 및 LPG 할인법, 노인틀니법 등을 5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노 전 대통령 추모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의 서민정책 강화가 민주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회 등원 거부 부각시키며 맞불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농성에만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장관급 사무총장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에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서민중심의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 행보에 위기를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 서민 입법에 나서기 보다는 대안 없이 농성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4억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재산 30억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30억원의 재산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14억원의 재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본인 13억2천560만원, 배우자 16억7천

981만원 등 30억541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보유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8억8천만원)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8억800만원)였고, 예금은 본인 3억5천330만원, 배우자 9억2천369만원을 신고했다. 또 7천500만원 골프

회원권(본인 소유), 9천812만원 헬스클럽 회원권(배우자 소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을 합쳐 모두 14억6천33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천 후보자 본인은 28억7천500만원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와 9억1천200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6천만원 충남 논산 지, 8천78만원 예금, 1천700만원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및 사인간 채무는 20억5천만원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브라!!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11. 27. 시행 예정인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종합반 하루 9시간 강의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www.hanbitgosi.co.kr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10명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한빛고시학원

www.hanbitgosi.co.kr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10명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한빛고시학원